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2017. 5. 10 ~ 2018. 5. 9

발간사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은 것 중 하나가 대통령의 연설문입니다.

이 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2017년 5월 10일부터 2018년 5월 9일까지 1년 동안 행했던 각종 연설과 주요 회의 발언 등을 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전한 메시지도 수록했습니다. 모두 286개로 역대 대통령 연설문집 중 가장 많은 분량입니다.

국민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은 것을 공유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가 거둔 성과가 있다면 모두 국민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각 페이지 오른쪽 위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용 바코드를 넣었습니다. 전자책도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연설문집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쉽게 대통령의 말과 글을 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1년 문재인정부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고, 남은 4년 동안에도 길을 잃지 않도록 손을 꼭 잡고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차례

2017년

2017. 5. 25 수석·보좌관회의 …… 8
2017. 5. 29 수석·보좌관회의 … 11
2017. 6. 1 수석·보좌관회의 … 13
2017. 6. 15 수석·보좌관회의 … 15
2017. 6. 27 제28회 국무회의 … 17
2017. 7. 11 제30회 국무회의 … 21
2017. 7. 17 수석·보좌관회의 … 24
2017. 7. 25 제33회 국무회의 … 27
2017. 8. 7 수석·보좌관회의 … 29
2017. 8. 8 제35회 국무회의 … 31
2017. 8. 10 수석·보좌관회의 … 33
2017. 8. 14 수석·보좌관회의 … 35
2017. 8. 21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 … 36
2017. 9. 4 수석·보좌관회의 … 39
2017. 9. 5 제39회 국무회의 … 41
2017. 9. 25 수석·보좌관회의 … 43
2017. 9. 26 제42회 국무회의 … 45
2017. 10. 10 수석·보좌관회의 … 47
2017. 10. 16 수석·보좌관회의 … 49
2017. 10. 23 수석·보좌관회의 … 51
2017. 10. 24 제45회 국무회의 … 53
2017. 10. 30 수석·보좌관회의 … 56
2017. 11. 20 수석·보좌관회의 … 58
2017. 11. 21 제49회 국무회의 … 60
2017. 12. 4 수석·보좌관회의 … 63
2017. 12. 11 수석·보좌관회의 … 65
2017. 12. 18 수석·보좌관회의 … 67
2017. 12. 19 제54회 국무회의 … 69

음성변환 바코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리더기를 사용해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2018년

2018. 1. 2 제1회 국무회의 …… 72
2018. 1. 8 수석·보좌관회의 … 74
2018. 1. 16 제3회 국무회의 …… 76
2018. 1. 22 수석·보좌관회의 … 79
2018. 1. 29 수석·보좌관회의 … 81
2018. 2. 5 수석·보좌관회의 … 84
2018. 2. 13 제7회 국무회의 …… 87
2018. 2. 19 수석·보좌관회의 … 89
2018. 2. 26 수석·보좌관회의 … 91
2018. 3. 5 수석·보좌관회의 … 93
2018. 3. 12 수석·보좌관회의 … 95
2018. 3. 13 제11회 국무회의 … 97
2018. 3. 20 제12회 국무회의 … 99
2018. 4. 2 수석·보좌관회의 …101
2018. 4. 9 수석·보좌관회의 …103
2018. 4. 10 제16회 국무회의 …105
2018. 4. 16 수석·보좌관회의 …107
2018. 4. 23 수석·보좌관회의 …109
2018. 4. 24 제18회 국무회의 …111
2018. 4. 30 수석·보좌관회의 …113
2018. 5. 8 제20회 국무회의 …115

2017

수석·보좌관회의

2017. 5. 25

문재인정부 첫 번째 수석·보좌관회의입니다. 저로서는 10년 만에 수석·보좌관회의를 하는 것이라서 여러모로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수석·보좌관회의는 청와대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을 놓고 볼 때 청와대가 머리라고 생각한다면 수석·보좌관회의는 뇌의 중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정의 가장 중요한 사항, 특히 대통령 어젠다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처음인 만큼 제가 옛날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회의가 많습니다. 내부 회의뿐만 아니라 부처와 조정하는 회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치여 정말 허둥거리게 되기 때문에 횟수만 생각하면 수석·보좌관회의라도 최대한 줄이는 게 도와드리는 길이지만, 그렇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월요일과 목요일은 정례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다 주재하고, 나중에 정착이 되면 한 번은 제가 주재하고 한 번은 비서실장이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외부 일정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비서실장이 주재해 주시고, 비서실장도 안 계시면 정책실장이 주재해 주십시오.

회의 시간은 논의해 보시죠. 실무진의 준비까지 감안해 주십시오. 너무 이른 시간에 회의가 열리면 실무진이 새벽부터 일하게 되고, 특히 월요일 회의를 일찍 하게 되면 실무진은 일요일에 휴일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시간을 정해 주시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 같은 금요일 회의는 오전 10시 반쯤 여유 있게 시작해도 좋고, 월요일 회의는 아예 오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적절하게 논의해 주십시오.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고 안건, 다른 하나는 논의 안건입니다. 각 실과 수석실 업무 중에 가벼운 사안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 주시면 되지만, 청와대 전체가 공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수석·보좌관회의 보고 안건으로 올려 주시면 됩니다.

논의 안건은 그야말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통령 지시 사항도 수석·보좌관회의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각 부·실의 사안이라도 전체적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자고 판단하면 논의 안건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보고 안건과 논의 안건 구분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보고 안건도 진행하다 이런저런 논의가 생겨나면 논의 안건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당부하자면 청와대 일이 크게 정책·안보·정무로 구분되는데, 정부 부처에 칸막이가 있듯이 일을 하다 보면 청와대 내부에서도 자연히 칸막이가 생겨납니다. 안보에 관한 사항은 안보 라인 쪽에서만 논의되고, 정책 사항은 정책 쪽에서만 논의되고, 정무적인 것은 정무 쪽에서만 논의되는 등 청와대비서실 내부에서도 칸막이가 많이 쳐집니다. 과거에 이라크 파병 문제가 그런 사례였습니다. 한편으로 대단히 중요한 정무적 사안인데, 상당 기간 안보실에서만 논의되어 가닥이 어느 정도 잡힌 다음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정무 쪽에서

도 그 논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좀 더 일찍 정무가 논의에 참여했으면 결정이 다르게 흘러갔을 수도 있고, 똑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여론을 설득해 가면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안보 라인에서만 논의를 하다 보니 좁은 논의가 됐습니다. 한미 FTA 같은 경우도 전형적으로 정책실 차원에서만 오랫동안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정무까지도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과거를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 정책 사안이나 안보에 관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유하거나 논의해야 일을 맞들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보고 안건이나 논의 안건을 깊이 있게 토론하다 보면 수석비서관이 다 파악을 못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일 회의 안건 담당 주무비서관은 함께 참여시켜서 혹시 논의가 깊이 흘러가면 주무비서관이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석·보좌관회의를 과거에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는 다 잊어버리십시오. 문재인정부 수석·보좌관회의는 문재인정부답게 새롭게 해야 합니다.

수석·보좌관회의는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다 함께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원칙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는 공유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나중에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진 사항을 대변인이 발표할 때도 대통령 지시 사항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구분해서 발표하면 됩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발표하면 되고, 그와 별개로 대통령 지시가 있으면 그건 그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7. 5. 29

오늘은 보고 안건 이외 여러 건이 있고 논의 안건도 있는데,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당선 첫날에 곧바로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인사탕평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문제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새 정부가 하루빨리 진영을 갖추어서 본격적으로 가동하길 바라는 국민께도 큰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대선 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의 5대 중대 비리 연루자는 고위 공직자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그밖에 중대한 비리 등 더 큰 근절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특별히 5대 중대 비리라고 해서 공약했던 것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문제가 많이 됐던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 연루자의 고위 공직 임용 배제 원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문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구체적인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배제한다는 원칙은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원회 과정이 있었다면 그런 점을 감안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미 발생한 논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인사를 위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이 협의해 현실성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입니다.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야당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7. 6. 1

어제 이낙연 총리님이 취임했습니다. 인준 과정에서 좀 진통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인준 청문회가 활성화된 이후로는 최단 시일 내에 인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흠결이 적기도 하지만 국회에서도 새 정부의 국정이 조속하게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빠르게 총리 인준을 마쳐 주신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총리께서 인준이 되셨으니까 제가 약속했던 책임총리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적인 국정과제는 총리께서 책임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총리실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 어젠다에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지금 국정과제를 정리할 텐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해서 국정과제 가운데서도 청와대 비서실이 주관해 나갈 대통령 어젠다를 별도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와는 별개로 중요한 것이 일자리 추경인데, 일자리 추경도 최대한 빠르게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일자리 추경도 국회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회

의 협력을 구하는 노력을 열심히 해 나가야 하는데, 그에 앞서 국민께 일자리 추경이 왜 필요한지, 그 예산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또 그것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을 설명하는 작업을 청와대 비서실에서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실이 중심이 되어야 할 텐데 오프라인에서도 최대한 설명하고 온라인상으로도 설명해서 국민께 충분히 알려 드리고, 그 힘으로 국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저도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난 이후 적절한 시기에 직접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의 형태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국회의원들께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도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면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이야기 하냐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 속에 지방정책 공약부문도 정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정과제에 가야사(伽倻史) 연구와 복원 부분을 꼭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고대사가 삼국사 이후부터 연구되다 보니 삼국사 이전의 역사, 고대사 연구가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가야사는 신라사에 덮여서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차원에서는 가야사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경상북도까지 미치는 역사로 여기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더 넓습니다. 섬진강 주변부터 광양만, 순천만, 심지어 남원 일대, 금강 상류 유역까지도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넓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가야사 연구·복원은 영호남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영호남 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기회를 놓치고 나면 과제로 삼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충분히 반영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7. 6. 15

지금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 시스템과 인사 검증 매뉴얼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히 정부를 구성하는 데 온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協治)를 위해서도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의 이런 노력이 마치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 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정부 인사에 관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반드시 존중해야 합니다.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인사 청문 절차 자체가 없었던 것인데, 참여정부 때 검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청문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입니다. 야당의 본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이었는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인재입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인물입니다. 흔히 쓰는 표현으로 글로벌한 인물입니다. 우리도 글로벌한 외교부 장관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역대 외교부 장관들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외교 전문가들이 그가 이 시기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 적임자라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지지는 훨씬 높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한미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이어서 G20 정상회의와 주요 국가와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외교 비상 상황 속에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28회 국무회의

2017. 6. 27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으로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내각이 완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前) 정부에서부터 계속 일하시는 국무위원들께는 무거운 짐을 빨리 벗겨 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임명권자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고 국민 모두를 위한 봉사자입니다. 새 내각이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사명감으로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로부터 임명되었든 여러분 모두 문재인정부의 초대 국무위원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함께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미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총리님을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특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추경과 「정부조직법」입니다.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입니다.

국민께 선택받은 정부로서 국민께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역대 정부를 돌아보더라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서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펼칠 수 있도록 국회가 언제나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정치 도의(道義)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자리 추경이나 최소한의 정부 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논의가 지체되면서 최악의 실업난과 소득분배 악화로 국민께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추경은 민생안정과 소비를 진작하는 고용 확대 정책입니다. 하락 추세의 경제성장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일자리 추경 집행은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난 2년간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목표성장률도 2.6%로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4분기에 우리 경제는 1.1%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아직 내실 있는 성장은 아니지만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과 소비만 살려 낸다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경제를 성장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합니다.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도 있다, 다시 3% 성장 시대를 열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경제팀의 전망입니다.

지금이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추경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절박한 이유입니다. 지금 주가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빠르게 상승하는 것도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이번 추경은 지방과 지역의 일자리 지원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부족한 소방공무원 충원과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노인 일자리 확충 등 대부분 지역을 위해 쓰일 예산입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과 가뭄 피해 복구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 특히 야당이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제 상황과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국회가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준다면 국민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정부도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어려운 고용 상황과 추경의 취지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서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또 각 부처 장관님들은 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3%대 성장 시대의 회복을 위해서 정부도 국회도 마음을 모아 달라, 그리고 함께 뛰어 달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정부 조직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되어야만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펼칠 수 있고, 예산부터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제가 처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대한 당부를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입니다.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를 하달하거나 또는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국무회의는 살아 있는 국무회의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처에 관한 안건이라도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부처에 관한 안건이라고 해서 '이게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서도 안 됩니다.

‘차관회의에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됐겠거니’ 하고 예단할 일도 아닙니다. 다른 부처의 일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 논의에서 필요한 것은 꼭 전문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상식의 관점으로 논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는 일에 괜히 나설 필요가 없다고 지레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의견이든 말할 수 있어야 살아 있는 토론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도 늘 옳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이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의견도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살아 있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제30회 국무회의

2017. 7. 11

모두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주 벅찬 일정이었는데, 다행히 미국 방문에 이어서 G20 정상회의와 함께 많은 단독 회담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모든 나라로부터 지지받았고, 또 북핵문제가 G20 정상회의 의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 제기에 의해서 국제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아주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첫 정상 만찬 회담을 통해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성과였고, 베를린(Berlin)을 방문하는 기회에 쾨르버재단(Körber-Stiftung) 연설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힐 수 있었던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당장은 멀어 보이는 일이지만 우리가 남북 관계를 위해 노력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길도 그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그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핵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과 당장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적 제재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

다.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 낼 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인 자유무역주의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에 있어서도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각 나라가 국익을 앞세우는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국익을 중심에 놓고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국익을 관철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 역량을 키워 나가야 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외교 무대에서 워낙 많은 일이 있어서 많은 시간이 흘러간 느낌인데, 막상 귀국해 보니까 국회 상황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한결같이 지금 세계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2015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3.1%였는데 2016년 3.5%로 높아졌고, 올해는 3.6%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제정치적으로는 지금 보호주의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각국이 이 경기 상승세를 살려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또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모든 국제기구가 한목소리로 강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추경은 그 방향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을 2%대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 조직 개편도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살려 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 미국이 FTA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에 대응하는 통상교섭본부를 빨리 구축하기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야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추경과 정부 조직 개편을 인사 문제나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추경과 정부

조직 개편만큼은 야당이 대승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이하 정부 각 부처에서도 추경과 정부 조직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7. 7. 17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입니다. 또한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중심의 국민 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 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8년 만에 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고통분담을 떠안아 준 사용자 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 준 최저임금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의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대책을 믿고 변함없이 영업과 고용 유지에 힘써 주시고,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도 지원대책과 관련된 법안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정부패와 방산비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켜 주신 국민의 가장 간절한 여망입니다.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또 새 정부가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과제입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反)부패 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여 국가 차원의 반(反)부패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가 되어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하면서, 당시 국가청렴도지수 또는 반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부에서 중단이 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부패가 극심해졌습니다. 그 훈령이 아직도 살아 있기 때문에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하여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비리가 끊임없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하여 방사청장의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의 구멍을 뚫는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입니다.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개별 사건의 처리로 끝나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협의회를 운영해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 방안을 아까 말씀드린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의 안건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33회 국무회의

2017. 7. 25

정부 조직이 개편되고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새 정부의 틀이 갖추어졌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받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추경의 경우 이제는 정부가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추경과 목적예비비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의 완화에 효과가 있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적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제외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보면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이 실제 경제생활 속에서 공정과 정의가 구현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공허한 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경제부총리께서 발표하시고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내용이고, 오늘 회의에서 확정하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새 정부가 경제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한다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사람중심 경제라는 목표

와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오늘 깊이 있고 자유로운 토론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토론이 끝나면 전 부처가 공유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힘을 모아 나갈 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당부합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7. 8. 7

어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국을 포함한 만장일치로 전례 없이 신속하게 채택되었습니다. 북한은 이번 제재 결의로 국제사회가 보여 준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인식하여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통화하여 최근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에 관해 협의하였습니다. 미국은 확장 억제를 포함한 확고한 한반도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 두 나라는 물샐틈없는 연합 방위 태세에 기반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원칙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대결이 아닌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도발도 물리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단합된 모습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하고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튼튼한 힘이 될 것입니다.

공관병(公館兵)에 대한 갑질 사건은 많은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주었습니다. 국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군 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러 간 청년들이 농사병, 과외병, 테니스병, 골프병 같은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 노릇한다는 자조(自嘲)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방부가 시행하는 전수조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일부 문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확한 실태 조사와 분명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 부처 차원에서 갑질 문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해외 공관을 포함해서 공관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찰 고위 간부들이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등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군과 공직사회의 갑질 문화를 근절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제35회 국무회의

2017. 8. 8

여러 통계 지표를 보면 소득분배지수는 계속 악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위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책인 동시에 일자리정책이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정책입니다. 시혜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 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보육·교육·의료 등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넷째, 무너진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각 부처는 국민께서 생활에서 실질적 도움을 받고 복지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분야별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특별대책을 당부합니다.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

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몰래카메라 영상물이나 합성 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몰래카메라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몰래카메라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 등 전방위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 차단하는 AI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98%의 적중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신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물가 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합니다. 올여름은 가뭄과 폭우, 폭염으로 이어지는 이상기후로 인해 많은 국민께서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앞으로 대비할 일을 각 부처별로 꼼꼼하게 짚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뭄·폭우·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수산물 공급 이상으로 인한 생활 물가 급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련부처에서는 더위에 물가까지 올라 국민께서 속 타는 일 없도록 선제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수석 · 보좌관회의

2017. 8. 10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기본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헌법 가치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그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제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했고, 오늘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 최저선 보장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병원비 때문에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고, 결국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독거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도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 그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정책이 혼선 없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안전·생명·복지·의료·보육 등 복지 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전달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수급으로 복지재정 누수가 없도록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이 세금 폭탄이나 건강보험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지 궁금해 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복지 확대의 속도가 늦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점을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7. 8. 14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한반도와 주변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국과 협력하여 이러한 상황이 심각한 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반드시 지켜 나갈 것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도발과 위협적 언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남북 간 교류·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부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 국익이 최우선입니다. 대한민국 국익은 평화입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동맹입니다. 미국 역시 현재 사태를 우리와 같은 기조로 냉정하고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무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평화와 협상이 고통스럽고 더디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위기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사시 대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

2017. 8. 21

먼저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한층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평화가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현 상황이 전쟁 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북한은 추가 도발과 위협적 언행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한 대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바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정에 적극 동참하기 바랍니다. 북한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대립이 완화되고,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를 지켜 낼 수 있으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안정과 번영의 미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을지훈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관군의 방어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빌미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도발적인 행동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은 자신들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한미 합동 방어 훈련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을지훈련을 통해 모든 정부 관계자들과 군 장병들은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어 주기 바라며, 국민께서도 어느 때보다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합니다. 이번 계란 파동으로 인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선량한 농업인, 음식업계, 식품제조업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파동에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고, 정부가 가진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께 알리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발표에도 착오가 있었던 것이 국민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킨 면이 있습니다.

먹거리 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국민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 등 해결 과정을 소상히 알려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파동을 계기로 축산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되짚어 보고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양계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전반에 걸쳐 공장형 사육, 밀집 감금 사육 등 축산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동물 복지와 축산 위생을 포함해 사육 환경 전반을 짚어보기 바랍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을 줄이는 근본 해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관리 시스템을 범부처적으로 평가·점검하고 분산된 정책을 국민안전 측면에서 재조정·개편하여야 하겠습니다. 대응 매뉴얼도 점검해서 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주기 바

랍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유사 사태 발생 시 원인부터 진행 상황, 정부 대응 등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축산 안전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가 국민 식생활 역량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합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관계부처 TF를 구성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종합 계획과 집행을 위한 국가 식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총리께서 직접 확인·점검·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7. 9. 4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에 대해서 안보 차원의 대응 방안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했습니다. 정책실에서는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점검하고 시장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경제대책회의를 여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보 상황이 아주 엄중한데 이에 대한 초당적 대처, 그리고 생산적인 정기국회를 위한 여·야·정 소통과 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때부터 누구나 협치를 말해 왔고, 5당 원내대표 회동 때도 야당 원내대표들이 흔쾌히 동의하고 환영했던 방안인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이 여당과 함께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다시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구성을 위해 대통령이 각 당 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회동할 용의가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정부 초기에 급하게 인사를 하느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마쳤으니 지금까지의 인사를 되돌아보면서 인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인사수석실 산하에 인사 시스템의 보완과 개선 방안을 자문할 인사자문회의를 두었으면 합니다.

둘째,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협의해서 인사 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인사수석실이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서 인사 추천의 폭을 넓히고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과거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상당한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되살리는 한편 '국민추천제'를 시행하고 민간의 인사 발굴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해 나가 주기 바랍니다.

제39회 국무회의

2017. 9. 5

오늘은 법안 심사와 함께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논의합니다.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 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이 한가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임시 공휴일 지정을 임박해서 결정하게 되면 국민께서 휴가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산업 현장과 수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국민께서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에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휴일 지정을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 추석 연휴와 함께 사상 유례 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국민께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번 추석 연휴가 내수 진작과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연휴가 길어지면서 오히려 피해를 보거나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일간의 긴 연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이 납품 대금 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해 피해에 대한 금융 지원, 보험금 지급 등도 차질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식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와

임금 체불 방지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사전에 마련해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 밖에 일용직 노동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연휴 기간에도 일하는 노동자와 연휴가 길어서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국민께서 편안하고 풍성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물가 관리, 안전 관리 등 민생안정대책도 꼼꼼히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올해 가뭄과 폭염 등 채소류 작황이 좋지 않고 AI,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생활 물가 불안이 특히 심각한 만큼 추석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에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긴 연휴 기간 중 교통, 식품위생, 재난 대비, 응급 의료 등 모든 안전 분야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하여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7. 9. 25

국민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유엔총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지만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총회 참석 및 각국 정상들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와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흔들림 없이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신뢰를 확보한 것과,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으로 안전하게 치러질 것이라는 신뢰를 확보한 것도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우리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지키고, 그에 대한 확신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주는 것은 경제의 성장과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유례없는 한반도의 긴장과 안보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적어도 이 문제만은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단합된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사법부 수장의 공백 우려로 국민 걱정이 컸는데,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신 국회와 야당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하여 대화를 나누는 자리

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더욱 생산적인 정치를 펼치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치권이 국민께 국가적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라는 추석 선물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여야 지도부에 예우를 갖춰서 회동 취지를 잘 설명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내실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제42회 국무회의

2017. 9. 26

이번 유엔총회 방미 길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행사 중 하나가 미국 금융·경제인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설명회'를 한 것이었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아주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신뢰를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을 '사람중심 경제'라고 규정하고, 첫째, 일자리와 소득 주도 성장, 둘째, 혁신성장, 셋째, 공정경제라는 3개의 축으로 사람중심 경제가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3개의 축 가운데 일자리와 소득 주도 성장, 공정경제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민께도 여러 차례 방안을 보고 드리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혁신성장은 아직까지는 그 개념이라든지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느낌이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혁신성장은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 주도 성장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이미 올해 추경에 혁신성장을 위한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서 집행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더더욱 본격적으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또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활동을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혁신성장에 대해서 경제부처가 더욱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과 그에 대한 소요 예산, 정책이 집행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집행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7. 10. 10

아주 긴 연휴였는데 많은 분이 연휴에도 수고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교통량은 역대 최대였으나 교통사고는 오히려 작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절도나 가정 폭력 같은 각종 범죄도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연휴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하신 노동자, 안전·치안을 담당한 경찰·소방공무원, 국가안보를 굳건히 지켜 준 국군 장병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이었습니다. 정부는 민심을 받들어 더욱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司正)이 아니라 권력기관, 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되어 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원칙과 자신감을 갖고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민생에 있어서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성과에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 주기 바랍니다. 북핵위기가 발목을 잡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제 기반은 아주 튼튼하고 굳건합니다. 지난달 수출이 551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작년보

다 35% 증가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2%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경제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서 그 혜택이 국민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막바지에 이른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의 핵심인 토론과 숙의 과정을 아주 공정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어떤 간섭이나 개입 없이 공정과 중립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왔고, 공론조사 결과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여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그리고 국민께서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저는 대선 때 탈원전정책과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공기(工期)가 상당 부분 진척되어 건설 중단과 계속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공론조사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는 그 결과에 따르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공론화 절차는 결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될 경우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공론화 절차는 더 큰 비용을 줄이면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값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고리5·6호기만의 해법이 아니라 공론화에 의한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면서 사회적 갈등 사안의 해결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을 당부합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7. 10. 16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과로 사회'입니다. 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 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 풍토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시간이나 더 많은 실정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 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 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합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국회의원이 제기하는 문제에 삼권분립을 존중하고, 국민께 답변드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 만한 대안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 정책 보고 때 정책 이력을 함께 보고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국감에서 제시된 대안을 수용한 정책의 경우 언제 진행된 국감 때 어느 국회의원이 제시한 문제 제기와 대안에 따라 정책이 마련되었다고 밝혀 줍니다. 과거 정부에서 있던 정책을 발전시킨 경우 어느 당·정부를 가리지 말고 '어느 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이 어떻게 발전되었다'고 경과를 밝혀 주면 될 것입니다. 협치나 통합의 정치,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7. 10. 23

최근 우리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출과 투자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IMF에 이어 한국은행이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금융시장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북한 리스크와 중국과의 사드 갈등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긍정적 기대감이 경제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혁신기업이 경제활력과 미래를 이끌 근간인 만큼 혁신창업대책 등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600억 원의 모태자금을 출자하여 연말까지 1조 4,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펀드가 혁신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력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경기회복 온기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고용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더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사회 유력 인사들의 청탁에 의해서 비리가 행해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온 셈이어서 국민께 아주 큰 실망을 주고,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 주기에 충분합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 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 책임과 인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채용 절차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감독 체계도 강화하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비리가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제45회 국무회의

2017. 10. 24

오늘 회의에서는 신고리5·6호기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 갈등 현안 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국가 갈등 과제를 소수의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추진하기보다는 시민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19세 청년부터 82세 어르신까지 온 국민을 대표한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기간 내내 진지하게 숙의 과정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시민참여단은 98.5%라는 놀라운 참여율로 최종 조사에 임하여 국가의 장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지혜롭고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들도 공론화 과정을 완주하면서 건전한 토론의 장을 이끌어 주셨고, 공론화위원회는 그 모든 과정을 책임 있게 잘 관리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탈석탄·신재생 확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의 논의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현안을 결정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

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론화의 뜻이 승자와 패자,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정부 후속 조치 과정에서 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108일 남았습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IOC·IPC 총회는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준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과 티켓 판매는 30% 수준으로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올림픽은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전 국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무총리께서 올림픽의 상징인 성화 채화를 위해 그리스를 방문 중입니다. 성화는 앞으로 그리스에서 봉송한 후 대회 100일 전인 11월 1일 한국에 도착하여 101일 동안 7,500명의 주자에 의해 전국을 누비며 국민과 함께할 계획입니다. 이 성화 봉송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붐 조성을 위한 확실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문·방송·온라인·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 홍보를 추진하고, 특히 젊은층의 참여를 위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각 부처도 부처별 정책 고객에게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고, 주요 행사를 평창 홍보의 계기로 활용하는 등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에 힘을 모아 주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혁신처가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대한 순직 인정 방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돌아가신 고(故) 김초원, 고(故) 이지혜 두 분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다행히 두 분의 숭고한 희생은 순

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관련 제도 미비 때문에 비정규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 중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순직 인정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논의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에 이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분들을 국가가 순직으로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차별 해소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7. 10. 30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북핵위기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3/4분기에 1.4%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때 욕심냈던 금년 3% 경제성장률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업·노동자 등 각 경제 주체가 최선을 다한 결과이자 일자리 추경 등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경제정책이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양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장률 회복이 일자리와 소비 증대로 이어져야 성장 혜택이 가계로 미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기회복의 온기가 청년구직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야에 골고루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시행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나아가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정책을 더욱 자신 있게 추진하여 왜곡된 성장 구조를 바꾸고 질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양

극화가 심화되고 내수가 위축되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업이 먼저 피해를 보게 되고,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해외로 나가면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 가는 노력을 할 때, 국가경제가 더 발전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 주체들에게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 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비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킬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7. 11. 20

오늘 오전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입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당장은 피해 복구와 차질 없는 수능 실시가 최우선입니다. 긴급한 일이 끝나면 안전과 재난 대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11월 23일로 연기된 수능일에도 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지침을 미리 마련해 두겠습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께서는 너무 걱정 마시고 수능시험장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에 따르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직까지 추운 날씨와 여진의 공포 속에서 집을 떠나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신 포항과 인근 지역 주민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또 APEC과 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는데, 아세안 국가들의 호응이 매우 컸습니다. 신남방정책은 지난 9월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에서 발표한 신북방정책과 함께 남과 북을 연결하는 번영 축을 이루면서 우리의 외교와 경제지평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세안 국

가와 방산 인프라 구축,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스마트 시티 등의 협력을 확대하고, 2022년까지 교역액을 2,000억 달러로 늘려 나가자고 뜻을 모은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동남아 순방을 통해 아세안의 급성장과 역동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 또한 매우 크다는 것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고, 또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세안과 경제교류를 촉진하는 것은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포스트 차이나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신남방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들을 잘해 주기 바랍니다.

청와대 누리집 국민소통광장에 국민 청원이 많이 접수됩니다. 참여 인원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청원도 있습니다. 현행 법·제도로는 수정이 불가능해서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국민께서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이라도 장기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할 때 참고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의견이든 참여 인원 기준이 넘은 청원은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성의 있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 인원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도 관련 조치가 이뤄지면 그 결과를 성실하고 상세하게 알려 드리기 바랍니다.

제49회 국무회의

2017. 11. 21

정말 세상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 참 마음 같지 않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 중소 상공인, 벤처창업에 대한 지원 육성이라고 생각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는데, 정작 장관 임명은 가장 늦어져서 이제야 홍종학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중소벤처기업부가 힘 있게 활동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조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갈 길이 바쁘다는 사정을 감안해서 양해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홍종학 장관께서도 반대가 많이 있었던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 주고, 그런 반대나 염려가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포항 지진의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아직도 많은 시민께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대피소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불편과 불안, 추위로 고생하는 포항시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재민 주거 지원, 파손 주택 복구 지원 등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연기된 대입 수능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철저히 준

비해 주기 바랍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정부의 대책을 믿고 따라 주고, 특히 포항 지역 수험생들은 힘내기 바랍니다.

이번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진대책이 지진이 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실시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 설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인 기존 건축물은 여전히 지진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특히 공공 시설 가운데는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 시설, 사유 시설 가운데는 서민 주거 시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런 취약 시설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내진 보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긴급한 피해 복구가 끝나는 대로 지진방재대책 전반을 점검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근본대책을 차근차근 꾸준하게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지진에 취약한 학교 시설, 다중이용시설과 지진 발생 시 국민 불안이 큰 원전 시설, 석유화학단지 등부터 종합 실태 점검을 통해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한반도 지진단층 조사, 450여 개 활성단층의 지도화, 지진 예측 기술 연구, 재난 대응에 대한 인적 투자 확대 등 지진방재대책의 종합적 개선·보완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아서 국민 우려가 매우 큽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대부분 우월한 지위가 배경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의하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78.4%, 무려 80%에 가까운 사람이 참고 넘어갔다고 하고, 그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

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48.2%라고 합니다. 성희롱 피해 경험자 중에 직장 내 기구를 통해 공식 처리를 한 사람은 0.6%로 1%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직장 내 성폭력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겁내서 문제 제기를 못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직장 내부 시스템과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공공기관부터 기관장들의 인식 전환과 더욱 엄정한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성희롱·성폭행 예방은 물론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나 문화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성희롱·성폭행 문제에 대해서도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북 고창 오리 농가에 이어서 순천만의 철새 분변(糞便)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되었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초동 대응이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규모와 지속 기간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가 아주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시기인 만큼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도 초동 대응과 확산 방지에 힘을 모아서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7. 12. 4

어제 낚싯배 충돌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찾지 못한 두 분에 대해서도 기적 같은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하고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 책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여겨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수습이 끝나면 늘어나는 낚시 인구를 위해 안전관리제도나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민께서도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 호전을 이어 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새해 예산안도 그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국민께서도 한마음으로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 정치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기 바랍니다.

IMF·OECD 등 국제기구는 우리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를 적극 지지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상승세를 지속시키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 편성 때에도 야당의 많은 반대가 있었

지만, 이후 3/4분기의 높은 성장률에 추경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정파적 관점을 넘어 경제의 호기를 살려 나가자는 차원에서 결단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대선 때 국민께 드렸던 공약을 실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7. 12. 11

지난주 금요일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 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기관장이나 고위임원이 연루된 사례도 상당수였고, 채용 절차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미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한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먼저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사회 고질이 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공정한 채용문화의 확립을 공정사회로 가는 출발점으로 여겨 주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여망에 화답해 주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촛불정신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부패 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에 불고 있는 훈풍을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골고루 퍼지게 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 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 바랍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지어 주기 바랍니다. 민생과 경제는 여야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책임 있게 결단을 내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 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의료 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런 만큼 의료 수가 체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랍니다. 정부도 의료 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7. 12. 18

이번 중국 방문은 외교의 시급한 숙제를 연내에 마쳤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4대 원칙 등 정치·안보 분야까지 포함해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와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매우 내실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방문으로 한중 양국은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성숙한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교 관계는 양국 간의 신뢰 구축과 양 국민 간의 우호 정서 증진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지만 정부만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국민이 마음을 함께 모아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3% 이상으로 높아지고 고용률도 높아지는 등 거시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대 후반 인구는 올해에만 9만 명을 포함해 2021년까지 총 39만 명이 증가했다가 2022년 이후부터는 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터 2021년까지 청년일자리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모두 이 점을 직시하고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대책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19조 2,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연초부터 빠르게 집행하여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게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내년 1월 중으로 청년일자리 상황과 대책을 점검하는 청년일자리 점검 회의를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중국 방문으로 다들 고생했고 성과도 좋았는데 홀대니 하면서 폄훼하니까 속상하시죠? 그래도 워낙 실질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저절로 인식이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 방문 마지막 날부터 그런 성과를 제대로 설명해서 국민의 평가도 많이 바로잡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뚜벅뚜벅 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54회 국무회의

2017. 12. 19

중국 방문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은 무엇보다 외교의 시급한 숙제를 마쳤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확고히 하는 한편 시진핑(習近平) 주석 등 중국 지도자들과 우의와 신뢰를 돈독히 하고 중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내실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은 경제·무역 채널의 전면 재가동을 포함하여 정치·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관계는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성숙한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앞으로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 사업에 있어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MOU를 체결하는 등 실질적 합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께서 이번 방문 성과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각 부문의 성과를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중국 국빈방문을 끝으로 올해 정상외교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취임 후 7개월 중 한 달가량 외국을 순방하여 7개국을 방문하였고, 유엔총회, G20 정상회의, APEC, ASEAN+3 등 여러 다자회의에 참가했으며, 정상회담만 총 40여 회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출범 때 물려받은 외교 공백을 메우고 무너지거나 헝클어진 외교 관계를 복원하는 등 시급한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주변 4개국과의 관계를 정상 궤도로 복원하고,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 외교 지평을 유라시아와 아세안까지 넓혀 정부의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 토대를 더욱 내실 있게 다진 것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다자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원칙, 사람중심 경제와 같은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국익과 국민을 우리 외교의 최고 가치로 삼아 실사구시(實事求是) 실용외교를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안보와 평화를 이끌고 경제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국익을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외교 방향을 정하고 국민 안정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외교부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가 합심하여 우리 외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기 바랍니다.

2018

제1회 국무회의

2018. 1. 2

나라다운 나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달려온 격동의 2017년을 뒤로하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은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가 1차 국정목표였다면 올해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가 바로 내 삶을 바꾸는 일이라는 체감을 국민께 드리는 것이 국정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3%대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하면서 경제활력을 살려 냈습니다. 올해는 경제 활력을 더 키우면서 일자리 확대와 가계소득 증가로 연결시켜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데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재해와 사고가 많았습니다. 국민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얼마나 나아가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어 주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각오를 새롭게 하고 안전 관련 정책에 더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파견과 남북 당국 회담의 뜻을 밝힌 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을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의 획기적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하여 환영합니다.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남북대화를 신속히 복원하고, 북한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핵문제 해결과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외교부는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기 바랍니다.

수석 · 보좌관회의

2018. 1. 8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입니다.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오히려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 총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 원, 총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 체계 속으로 들어오게 해서 정부가 준비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관계부처는 영세 사업자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아파트 경비원, 청소 업무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

지 않도록 점검하고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 안정 점검팀'을 만들어 정부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고준희 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고,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범부처 아동학대대책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대책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근래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판단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동학대 발견율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까마득히 낮은 실정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사망 등 중대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리께도 아까 주례회동 때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하였지만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기존의 아동학대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제3회 국무회의

2018. 1. 16

정부 혁신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은 OECD 국가 중 33위, 정부신뢰도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도 조사 대상 국가 중 52위로 전년 대비 15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보여 준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 위상에 비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수준입니다.

2018년도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입니다.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부 혁신이 필요합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2월까지 범정부 혁신계획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 혁신의 방향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정책 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 내부의 칸막이 행정을 깨는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과 결산, 사업 보고서를 국민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 정보 외의 공공데이터와 자원을 전면 개방하여 국민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입니다. 정책 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인사·예산·조직·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합니다. 인사로 예를 들면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에서 10%로,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혁신의 주체는 공무원입니다. 위에서 시키는 혁신이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 스스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혁신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공무원들이 토론을 통해 혁신방안을 모아 범정부 혁신계획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 중 23.5%로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임금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 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로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입니다. 미국과 독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 진작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정부는 업종별로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에서 정책을 더 잘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해 주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종사자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올해 3%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

임금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빠르고 세밀하게 추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정부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8. 1. 22

우리는 지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의 길을 여는 소중한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마침 이 시기에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이 남과 북을 마주 앉을 수 있게 만들어 준 덕분입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의 평화가 최악으로 무너지고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마련된 남북대화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화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참가와 그를 위한 남북대화는 그 자체로 매우 의미가 큽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으로만 그친다면 그 후에 우리가 겪게 될 외교·안보상의 어려움은 가늠하기 어렵고, 또다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 덕분에 기적처럼 만들어 낸 대화의 기회를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 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북대화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로 이어지게 하고 다양한 대화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기회를 다시 만들기 어려운 만큼 국민께서는 마치 바람 앞에 촛불

을 지키듯이 대화를 지키고 키우는 데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치권과 언론도 적어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일만큼은 힘을 모아 주기를 당부합니다. 북한도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오랜 단절 끝에 모처럼 마련된 대화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성공을 위해 남과 북이 함께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며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8. 1. 29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이어져 국민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매우 큽니다. 또한 국민께서 많이 이용하는 중소 규모 다중이용시설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거듭 드러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을 따지자면 압축 성장 과정에서 외형적인 성장에 치우치면서 안전을 도외시했던 우리의 과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룩한 고도성장의 그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안전한 나라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대두된 이후에도 우리는 안전을 강화하는 데 마음을 모으지 못했고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국회·정치권의 공동 책임임을 통감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마음을 모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정부는 구체적 안전관리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거나 국회의 안전 관련 입법이 지체됐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전을 뒷전으로 여기거나 비용 낭비처럼 여겨 왔던 안전 불감증이나 적당주의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화재

를 계기로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화재안전대책을 새롭게 세워 주기 바랍니다.

교통 안전, 산업 안전, 자살 예방 등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국무총리께서 관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화재 안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화재 안전 대책 특별TF'를 구성하는 것을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 TF에 정부 관련 부처, 안전공사 등 공공기관,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 조사를 해 주십시오.

기존의 형식적인 점검 방법을 답습하지 말고 문제를 모두 드러낼 수 있도록 점검 방법을 새롭게 정립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점검 결과를 공개하여 실상을 국민께 알리고, 특히 이용자들이 그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점검 결과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안전 강화 조치와 이미 마련된 안전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집행하는 일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기에 실행하기 바랍니다.

중장기 대책 중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고, 이미 제출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정부의 입법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검토 바랍니다. 특히 중소 규모 다중이용시설이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건물 면적 기준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이용 실태에 맞게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강화된 화재안전대책을 이미 완공한 건축물에 소급 적용할 경우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재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소방차량 접근성을 확보하고, 대피와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 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화재 발생 초기에 자체적으로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다가 신고 시간이 지연되

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이나 편의점 등에서 직원이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나 사설 경비 업체와 연결되는 시스템처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비상벨을 눌러 소방당국에 쉽게 화재 신고를 하는 방안과 건물 내 자동화 재탐지 설비가 화재 경보와 동시에 소방서에 화재 발생 사실을 자동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활성화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8. 2. 5

지난주 현직 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면서 국민의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큽니다. 그동안 당사자가 겪었을 고통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 조직에서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이 발생했는데도 사실 조사 및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 차원의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국민께서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사건임을 명심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이번 기회에 끝을 본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성희롱·성폭력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문화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계 문화가 강한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먼저 달라지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 제기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적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이나 부서장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민간기업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엄

정 처리되고 피해자가 보호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보완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 어제 또 다른 현직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역시 엄정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은 검찰의 잘못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국민께서 가장 공감하고 있는 것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다시 당부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인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개헌안 마련과 합의에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와도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별히 국회에 당부합니다.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효력을 상실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국민투표법」을 방치하는 것은 개헌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루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위헌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회복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제7회 국무회의

2018. 2. 13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참여하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를 논의하게 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채용비리 전수조사 등 일련의 반부패 노력으로 수년간 흐트러졌던 공직사회의 청렴문화가 점차 정상 궤도를 찾아가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정부는 전임 정부의 부패에 대한 국민의 높은 반감과 엄중한 심판 속에서 출범한 정부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청렴도에 있어서 전임 정부와 확연히 차별화되는 획기적 진전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2017년은 중간에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정권교체 전후의 청렴도 비교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2018년에는 확실한 차별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연중 반부패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국민께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꼼꼼하고 세

심하게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 종사자 납품 대금 결제 등 경영상 어려움, 결식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등 올림픽 분위기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또한 행복해야 할 명절에 사건·사고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통, 식품위생, 재난 대비, 응급 의료 등 모든 안전 분야에 걸쳐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제수용품을 비롯한 설 용품 구입을 시작할 것입니다. 최근 기록적인 한파 때문에 도매가격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통시장,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직접 민생현장을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생산과 투자도 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 소비는 여전히 활발하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국내외 관광 수요 증가와 대회 운영 경비 지출 등으로 직접적인 내수 증진 효과가 기대됩니다. 올림픽과 함께 설 연휴 소비가 내수 회복의 모멘텀이 되고 경제의 개선 흐름이 더욱 견고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선제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8. 2. 19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 지역에는 설상가상 상황입니다. 특히 협력업체까지 이어질 고용 감소는 군산시와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를 위한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 규모가 15.8% 증가하여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수출 순위도 2016년보다 두 단계 상승한 세계 6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수출 증가는 지난해 경제성장 회복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 전자 · 태양광 ·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이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그러한 조치가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

하고 종합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와 같은 도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 냈듯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8. 2. 26

어제 폐회식을 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환상적인 올림픽이었다고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평화올림픽·안전올림픽·문화올림픽·ICT올림픽 등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 국민께도 많은 감동과 즐거움,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팍팍한 일상과 국정농단 사태, 촛불집회 등으로 힘들었던 국민께 모처럼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치유의 올림픽이 되기를 바랐는데, 그 목표도 실현된 것 같습니다. 올림픽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해 준 조직위원회와 강원도 관계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시고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주신 강원도민과 국민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후 시작될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도 또다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 사회 전 분야로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투운동을 무겁게 받아들

입니다.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선 사법 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합니다. 특히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젠더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범사회적 미투운동의 확산과 각 분야별 자정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존엄함을 모두 함께 누리는 사회로 우리 사회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근원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부터 먼저 근절한 다음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킨다는 단계적 접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투운동을 보면서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가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젠더폭력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한다는 자세로 유관 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그 때문에 2차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8. 3. 5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야가 끈질긴 논의와 타협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을 처리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과거 주40시간노동제를 시행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주5일근무의 정착으로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정부 · 기업 · 노동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누면서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을 갖게 하고, 부모가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관련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운송,

보건 등 남게 되는 특례 업종의 경우에도 과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인원이 100만 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인원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지원에 의해 지금까지 100만여 명의 저소득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것만 해도 작지 않은 성과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효과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곳곳에서 상생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 주는 버팀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내수와 소비를 확대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일자리 안정자금만으로 다 해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대료,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 문제,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관련한 각종 민생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는데,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8. 3. 12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남북 공동번영의 길을 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두 달 사이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해 낸다면 세계사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며, 대한민국이 그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우리의 역량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 내느냐 여부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정권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를, 군사적 해법이 아닌 외교적 해법을 전 세계가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가 성공하지 못했던 대전환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낙관하기 어렵고 과정도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만이 예측 불가능한 외부적인 변수들을 이겨 내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야, 보수 · 진보, 이념과 진영을 초월하여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국력을 하나로 모아 주시길 국민께 간곡히 당부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신당역에서 비장애인은 환승하는 데 약 7분이 걸리는 데 비해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약 40분이 소요된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30년 전 서울패럴림픽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뀐 것처럼 평창동계패럴림픽이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인식을 크게 높여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창올림픽을 성공시키려는 우리 국민의 노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구현하려면 패럴림픽까지 성공시켜야 올림픽의 진정한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패럴림픽에서 활약하며 감동을 주는 장애인 선수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구현될 수 있어야 비로소 성공한 패럴림픽이 될 것입니다. 국민께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성원해 주신 것처럼 평창동계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성원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방송의 동계패럴림픽대회 중계가 외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15km 종목에서 동메달을 딴 신의현 선수가 호소한 것처럼 우리 방송들도 국민께서 동계패럴림픽 경기를 더 많이 보실 수 있도록 더 많은 중계방송 시간을 편성해 줄 수 없는 것인지 살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제11회 국무회의

2018. 3. 13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산업·생산·투자·소비 등 실물경제지표에서 지속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체감지수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그리고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준비해 온 금융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3월 8일 발표한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창업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게 해 주기 바랍니다.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지원펀드와 보증 · 대출 프로그램도 조속히 마련하여 혁신성장을 뒷받침해 주길 당부합니다. 또한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었던 약속어음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약속어음은 기업 간 결제 수단이면서 신용 수단이지만, 납품에 대한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 부도 위험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한편으로 약속어음 폐지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자금 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책을 함께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중심의 낡은 담보 관행에서 벗어나 편리하고 다양하게 자금

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 채권, 기계 설비, 재고 상품, 원 · 부자재, 지적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 각종 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담보로 활용하여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부동산 담보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금융 선진화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바로 금융 선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새만금특별법」개정안 공포안을 오늘 의결하게 됩니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은 개발 전담기관을 통해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국민과 전북도민들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공사와 역할 분담을 통해 총괄적으로 사업을 계획 · 관리하도록 하고, 공사 설립 이전이라도 새만금지역 매립 및 개발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여 공사가 설립되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군산을 포함한 전북지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지역주민이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여 지역발전의 비전을 가시적으로 보여 줘서 지역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되찾고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제12회 국무회의

2018. 3. 20

모두 반갑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평창동계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경기장, 선수촌, 미디어센터 등 대회 시설이 완벽에 가깝다는 호평을 받았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 첨단 ICT 기술, 성숙한 시민 의식 등 '흠이 없는 것이 오히려 흠'이라는 최대의 찬사를 세계로부터 받았습니다.

국민께서도 성적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한마음이 되었고, 우리의 역량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도 IOC 위원장과 IPC 위원장 등으로부터 수없이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특히 북한 선수단의 참가로 평화올림픽, 평화패럴림픽을 이루어 내며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 진한 감동을 안겨 준 우리 선수들, 끝까지 미소로 헌신해 준 자원봉사자들,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준 군장병, 경찰관, 소방관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보다 대회 기간 내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우리 국민이, 그리고 강원도민이 최고의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만든 주인공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각 부처와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덕분에 큰일을 잘 치러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평창의 성공을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문화올림픽, 경제올림픽, 평화올림픽, ICT올림픽, 안전올림픽 등 각 분야에서 이루어 낸 성과가 더 큰 발전과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후속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관련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패럴림픽의 감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아 주기 바랍니다. 주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 체육 시설을 점차 늘려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준비되는 대로 현재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8. 4. 2

올해 첫 순방 외교였던 베트남과 UAE 방문을 잘 마쳤습니다.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잘 준비해 준 덕분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이고, UAE는 중동 지역의 핵심적 협력 파트너입니다. 두 나라 사이의 관계 격상과 함께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할 것을 합의하고 정상들 사이의 우정과 신뢰를 더욱 두텁게 만들었습니다.

베트남 순방에서는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위해 한국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회담 연례화와 2020년까지 교역액 1,000억 달러 달성 등 양국 간의 합의는 우리 외교와 교역을 다변화하고 신남방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UAE 순방에서 양국 관계를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UAE는 바라카(Baraka) 원전 건설에서 한국이 보여 준 시공 능력과 책임감, 안정성과 경제성에 대해서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관계자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합니다. UAE측은 25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방안을 우리에게 제안했고, 석유와 가스 개발, 신재생에너지, 항만 인프라, 과학기술, 국방 · 방산, 농업 등 다양한 협력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외교와 경제의 지평을 중동 지역으로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순방의 성과가 말로만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총리실과 관계부처가 함께 해외 순방 후속 조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번에 논의된 협력 사업들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과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주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통상교섭본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 개정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함으로써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은 매우 큰 성과입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동차 수출과 농업을 지켜 내고 철강 관세 부과 면제 등을 이끌어 내어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갈등 요인을 정리했다는 점에서도 아주 잘한 일입니다.

이제 정부는 이번 FTA 개정 협상이 한미 교역에 미칠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대책들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보호무역주의 추세와 미중 무역 갈등은 세계 6위 수출국이며 대외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입증된 우리의 FTA 협상 경험과 능력을 토대로 보다 높은 수준의 세계 경제 개방을 지향하면서 각종 무역 협상에 능동적이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당부합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8. 4. 9

원래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국민께서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시간을 늦췄는데, 시정연설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의 결산잉여금 2조 6,000억 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편성했습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금년도 초과세수를 미리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십 수 년 동안 가장 규모가 작은 이른바 미니 추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용도로 보면 청년일자리대책과 군산 · 통영 등 특정 지역 대책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때에 집행이 되면 두 가지 용도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청년취업난의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특정 산업의 구조조정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특별한 재정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견도 같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국가의 재정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청년고용난과 특정 지역 구조조정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추경의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 반대가 있으리라고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

선거 이후에 추경을 편성해서는 추경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의 구체적 용도와 기대 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어서 정부가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제16회 국무회의

2018. 4. 10

부처별 적폐청산 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습니다. 국민은 TF의 권고를 정부 입장으로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 · 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 부처는 그런 방침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국민께 불편을 끼쳐 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폐기물의 수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업무입니다. 하지만 혼란이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가 수수방관하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지방자

치단체 및 수거업체 등과 협의하여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비상 처리 계획을 마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혼란이 발생하기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은 작년 7월이고, 실제로 수입 금지를 시행한 것은 올해 1월부터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수입이 중단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관계부처가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SRF라고 부르는 고형 연료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사용 허가제를 도입하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 폐비닐에 대한 수요 감소를 예상해야 했을 텐데, 그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질이 좋은 재활용 폐기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폐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는데도 별도의 대책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성찰하면서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세계 각국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라는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간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등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고 대책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문제를 생활 폐기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 수거-처리뿐만 아니라 생산-소비-배출-수거-선별-재활용 등 순환 사이클 단계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생활 폐기물과 관련한 우리 생활문화와 생태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종합 계획을 범부처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8. 4. 16

오늘은 세월호 참사 4주기이자 제4회 국민안전의 날입니다.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한 것은 온 국민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한 약속, '미안하다, 잊지 않겠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1%가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 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우리가 여전히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지난 2개월간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이 지난주 마무리되었습니다. 30만여 개의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 사각지대를 현장 점검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5월로 예정된 결과보고 때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하여, 국민께서 공감하고 정부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함께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4월 20일은 제38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동안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꾸준히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과 차별

속에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지난 3월 5일 장애인정책 종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자립 지원, 탈시설을 통한 지역 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책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 8,000여 개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합니다. 또한 한 장애인단체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중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고, 국립장애인도서관 전체 신간도서 중 점자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10%에 머무는 등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권리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에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10년간 단 2건에 불과합니다. 관계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주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8. 4. 23

지난 20일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를 선언하고 그 실천적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를 발표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의 성의 있는 선행 조치로 높이 평가합니다. 전 세계도 일제히 북한의 전향적 조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소식으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중국·러시아·일본 등 이웃 국가들도 즉각적인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한반도 신뢰 구축과 평화로운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핵동결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청신호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동결로부터 출발해 완전한 핵폐기의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북한의 선행 조치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길 기대합니다.

이제 남북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군사적인 방법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정상회담 기간까지만이라도 정쟁을 멈춰 줄 것을 당부합니다. 남북과 북미 간으로 이어지는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핵과 전쟁 걱정이 없는 한반도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도 정부도 여야의 초당적 협력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회담에 임하겠습니다.

제18회 국무회의

2018. 4. 24

위헌인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단 한 번의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정치권 모두 국민께 했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 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비상식을 아무런 고민 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우리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의 처리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안전과 생명 보호 등 기본권 확대, 참정권 18세 하향과 국민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의 개선, 삼권분립 강

화 등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에 특별히 당부합니다.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8. 4. 30

판문점선언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역사적 출발입니다. 국제사회도 정상회담의 성과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6·25 한국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회담을 역사적 만남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가 정상회담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지지 의사를 밝혀 주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 주신 덕분입니다. 무엇보다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공적 회담을 위해 진심과 성의를 다해 준 김정은 위원장의 노력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판문점선언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과 핵 위협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한 평화 선언입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의 노력과 신뢰 구축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분야별 대화 체계의 전면 복원과 함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상시 협의의 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관계 개선이 정착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를 공동 목표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가 바라던 일로 한반도는 물론 세계사적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판문점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되돌릴 수 없는 역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첫발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그야말로 시작을 했을 뿐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첫째,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후속 조치를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잘 구분하여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추진하고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사전 조사·연구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셋째,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필요한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남북미 간의 삼각 대화 채널을 긴밀히 가동하고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 주기 바랍니다.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임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다만 국회의 동의 여부가 또다시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제20회 국무회의

2018. 5. 8

이틀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두 노고가 많았습니다.

취임 1년을 맞아 국무위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초심을 지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다들 열심히 해 주셨고, 잘해 주셨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처음 출범하던 그날의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 번 새롭게 해 주길 당부합니다.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을 넘겼는데도 국회에서는 심의 한 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은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아야 추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경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및 산업위기 지역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해당지역 주민들로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국채 등 빚을 내지 않고 재정 여유 자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도 없습니다. 국회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지만 민생추경과 같은 비정치적 사안을 정치 상황과 연계시켜서 상정조차 하지 않고 논의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국민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회가 하루빨리 책

임 있게 논의해 주길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높은 수준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루어 낸 성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부심을 갖게 해 주신 우리 어버이 세대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문재인정부는 효도하는 정부를 약속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시행을 통해 치매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최대 60% 수준에서 10%로 낮아졌고,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에 256곳 신설·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더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도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는 정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틀니 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춘 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도 낮출 예정입니다. 9월부터는 기초연금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500만 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효도하는 정부를 생활 속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정책을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고 챙겨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수석 · 보좌관회의 / 국무회의)
2017. 5. 10 ~ 2018. 5. 9

발행 대통령비서실
제작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일 2018년 7월 31일
인쇄·제본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인쇄사업소